

## ◎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-167호

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을 공고합니다.

2016년 5월 31일

금융위원회

###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된 「제재개혁 추진방안」(15.9.2)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, 제재의 중심축을 ‘개인제재’에서 ‘기관·금전제재’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함

#### 2. 주요 내용

##### 가.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(안 제21조제1항~제2항)

현행 5백만원,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각각 1천만원,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징벌 효과를 개선하되, 검사 거부·방해 등 현행

5백만원 또는 2천만원 부과사항 중 다른 법에서 重하게 제재하는 사항(5천만원)은 법률간 제재 형평, 기관제재의 실효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5천만원으로 한도를 인상함

#### 나.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 (안 제14조의2제2항)

대부업법상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하여, 과징금 부과한도를 ‘영업정지기간의 이익’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함

#### 다. 제재시효제도 신설 (안 제13조의2)

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위반행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하여, 제재시효를 5년으로 하되,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威

#### 라. 과태료 부과·징수업무 금감원 위탁 (안 제21조제5항)

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간 협력강화,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·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·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

명시함

**마. 퇴직자 제재 관련 금감원 위탁근거 정비 (안 제13조제7항)**

퇴직한 은행직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, 은행법(제54조의2)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을 보완하고,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·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中 경징계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

**3. 의견제출**

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 :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, 전화 : 02-2100-2613, 팩스 : 02-2100-2629, 이메일 : surf99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(주소 :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)

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/법령정보/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